

# 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8.31(목) -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과 불신을 일으킨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갑질 재발방지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방안입니다.

## (1) 갑질 재발방지대책 관련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중 하나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유통업계, 방송계, 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사 의경 전원 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

이달 8일 대통령께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피해가 밝혀진 지 6년 만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이제 다시 끼운 셈입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슴기 특별구제계정에 내년도 정부예산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책임인정과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정부의 대응을 시험합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를 둘러싼 위협 요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파동은 응급조치가 일단락되고 마지막 점검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화학제품에 대해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유해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36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안전성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未知)에 대한 공포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커집니다. 정부는 불안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이되 알기 쉽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등 모든 관련부처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